시 론

국민체조 처럼 국민 웃음체조를 하자

김 영 식
남부대 교수·웃음명상전문가

코로나19 이후 정부는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하고 격리 의무까지 사라지면서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온 국민들의 생활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웃음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필자로서 웃음과 행복에 관한 여러 자료를 찾아봤다. 눈에 띄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 마스크를 벗은 일본에서 한 시간에 7만원짜리 '미소 수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보도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가 생활화된 터라 '자연스럽게 웃는 표정 만들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동양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인들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는 공식발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안녕을 배려하는 에티켓 탓에 여전히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많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화장을 하거나 타인에게 애써 미소를 지을 필요가 없는 편리함도 있다 보니 마스크를 계속 쓰는 경우가 많아졌다. 마스크를 쓸 때와 벗었을 때의 확연히 다른 얼굴을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예도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고 전해진다. 초등학교 저 학년은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 친구의 얼굴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 미소 근육이 활성화되지 않아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학교에서 진행하는 '행복학 개론' 과목에서 수업 시간에 웃음 운동을 하는데, 그동안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했던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환하게 웃는 모양새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다. 그러나 지속적인 웃음 운동으로 가벼운 미소와 호탕한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작은 희망을 느껴본다. 과거에는 신경정신과와 관련한 질환들로 인해 병원을 가는 것을 꺼렸으나 요즘은 풍토병이 돼 버린 우울증, 수면장애, 대인관계의 어려움, 마음 관련 질환들로 인해 병원은 인산인해다.

그동안의 언론 통계를 보면 코로나19의 경우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022년 말까지 3만2천156명이 사망했다. 그런데 2020-2022년 자살로 숨진 사람은 3만9천267명이다. 그중에 여성과 청소년의 자살률이 느는 추세라고 한다. 정부는 지난 4월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가량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과 교량 등 자살 다빈도 장소를 관리해서 자살위험요인을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자는 20년 전에 앞으로 '웃지 못해서 많은 질병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고 그동안 학교에서 웃음 운동을 가르치자고 주장했으며, 범국민 웃음생명운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해왔다. 처음에는 외롭고 힘든 길이었지만 지금은 웃음을 되찾기 위해 돈을 지불하면서 노력하는 시대가 됐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자살예방, 우울증 치료 등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치료하기 위해 '범국민 웃음생명운동'을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은 것이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촛불의 흔들림으로 그 존재를 알 수 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웃음이 사라지는 상황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아파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미 우리 생활이 됐고, 기후 환경문제, 전쟁의 공포, 마약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 묻지마 살인과 폭력, 우울증과 자살의 증가, 정치의 불안으로 인한 국민 스트레스 증가 등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호모사피엔스 인간종은 그동안 소통이라는 강력한 도구로 지구의 우세종이 되었다고 한다. 웃음으로 소통(笑通)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 사회는 웃음을 잃어 갈 때 너무 많은 것들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물을 하찮게 여기고 좋은 물 마시기를 소홀히 하면 암(癌)의 발생이 늘어나듯이 웃음을 소홀히 하면 우리 몸과 사회가 병들어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다. 하루가 멀다고 쏟아져 나오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안들도 결국 웃고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 국회에서 '범국민 웃음생명운동' 법안이 발의되고, '국민체조 시~~~작' 처럼 '국민 웃음체조 시~~~작' 하하 호호호 하하 호호호 하하하하 하게 되면 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을 향하게 될 것이다.

기 고

빛고을 광주시민들의 '아우성 메아리'

정 영 수
조선대 겸임교수·경영학박사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의사형성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할 책무를 지며, 직책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 발언·표결의 자유와 불체포특권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실제 연간 세비 1억5천만원, 활동비 5천만원, 연간 후원금 1억5천만원, 9명의 보좌진의 급여로 연 3억8천만원이 국고에서 지급된다. 또 항공기 1등석, KTX·선박은 연중 무료이며 국고 지원으로 연 2회 이상 해외 시찰 시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으며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월120만원씩 연금을 받는다고 한다. 이러한 특권과 특혜를 갖고 광주시민의 대표로서 일해야 하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 존재감을 느낄 수 없는 것 같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진행중인 광주지하철 공사로 인해 모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을 것이다.

지하철은 지상철도에서 발생시키는 소음이나 분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고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침해당하지 않고 교통체증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한 대중들이 출퇴근이 용이한 직주근접(職住近接)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지만 필요성이 있으며, 완공되면 많은 편리성이 있다.

광주시에서 현재 운영중인 지하철 1호선 생활권 내 인구는 25만명이지만 2호선이 개통이 되면 70%가 늘어난 100만여명의 지역민들의 도시철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지하철 2호선 공사는 각 단계 및 공정별 착공시기에 따라 설계를 추진하고, 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해야만 착공 및 국비 60% 보조가 가능한 사업이다. 이에 지하철 2호선 1단계 공사는 6공구로 나뉘어 시행중에 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철물 등의 물가 인상으로 인해 공사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공사가 다소 지연돼 시민들의 각종 불편을 겪고 있다.

2023년에 완공키로 계획했던 2호선 1단계 사업은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2023년에서 2026년으로, 제2단계는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지연되면서 수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시 교통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광주시장과 국회의원들은 당초에 계획됐던 광주지하철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불거진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동선 파악에 나서면서 이 지역 일부 국회의원도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상임위 진행 도중에 코인거래를 한 김남국 의원을 보면서 국민들이 외면할 수 밖에 없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진정한 시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알아주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다가오는 내년 선거를 통해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국회의원들이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길 간절하게 바란다.

독자투고

무더위 속 차량 주차 시 창문 개방은 금물

요즘 한낮 날씨가 초여름을 방불케하면서 더위에 지친 일부 차량 운전자들이 차량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주차 시 도어의 창문을 살짝 열어놓는 경우를 종종 보곤한다.

하지만 이는 호시탐탐 차량 내 재물을 노리는 범죄자들에게 곳간문을 열어두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범죄의 타깃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야 선바이저 높이 만큼 조금만 열어 놓았을 뿐인데 절도 피해를 당했다고 황당해 할수도 있으나 전문 절도범에게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곧 한여름이다. 절도범죄도 기승을 부릴 것이다.

여름철 차량 절도 예방을 위해서는 달리 왕도가 없다. 차량털이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져 조금만 틈만 보여도 절도범들이 차량 내 금품을 훔쳐 달아나기 때문에 요즘 날씨가 다소 덥더라도 창문을 모두 닫는 것은 물론 차량 내부에 귀중품을 두지 말고 내릴 때 문이 확실히 잠겼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비록 차량 내 온도가 다소 뜨겁더라도 탑승 전 충분한 환기를 통해 얼마든지 내부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 아울러 여름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에 주차된 차량을 타깃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되도록 통행이 빈번한 조명이 밝은 곳에 주차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을 명심하자.

〈김덕형·무안경찰서 몽탄치안센터장〉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안내

소방서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3대 불법행위 단속을 시행하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로서 이들 시설이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또는 훼손 행위, 비상구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신고서와 증명자료(사진, 동영상)를 첨부해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된다. 포상액은 최초 신고 시 5만원, 동일인에게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단, 가명이나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대중·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교〉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광주시 풍암호수 원형보존 약속 번복 공신력도 추락

광주 풍암호수(저수지) 수질 개선안이 수심을 낮춰 담수량을 줄이는 매립으로 회귀했다. 주민협의체와 면담에서 광주시는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해 기부해야 하는데, 원형보존시 오랜 시간이 소요돼 전체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심과 수량, 수경계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요구에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3월 주민의 의견을 고려해 원형보존을 수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강 시장은 다시 한 번 만난 뒤 종합적인 입장을 공식화하겠다고 했으나 광주시가 번복했다며 반발이 거세다.

당초에 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자로부터 비용을 받아 수질 개선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현금 기부채납'은 법이나 협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질 개선까지 직접 추진하게 된 사업자 측은 서구 등이 참여해 운영한 TF에서 제안한 수심·수량 조정안으로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수 바닥을 매립해 수심을 1.5m로 낮추고 담수량을 현재 35만t에서 15만t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광주시는 주민 요구를 수용해 보려고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원형보존 방식을 적용하면 매년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리 비용 부담, 수질 개선이 늦어질 경우 공원 개발 사업 지연과 그에 따른 책임 문제와 소송 등을 우려하고 있다.

어쨌든 강 시장이 원형보존 약속을 뒤집는 꼴이 됐다. 3개월 만의 일이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됐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풍암호수를 품은 중앙공원 1지구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핵심이다. 광주시와 사업자, 서구 등 이해가 첨예하게 얽힌 현안임에도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안일한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환경적인 요인도 더 깊이 고려돼야 한다.

주민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행정의 신뢰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앞으로 논란은 불가피해졌다. 광주시는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필수인력 확충 전남 국립 의대에 딴지 건 의사협회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라 의료 사각지대인 전남지역 국립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 건강권 확보는 모른 체 하고 제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의도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속개된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마친 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문에는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을 통한 인력 확충 논의는 절대 불가하다는 점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함을 복지부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필수의료 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두터운 보상 통해 안정적 필수의료 및 지역 의료환경 마련,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등도 조건으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을 4대 안건으로 삼고 있는데, 의협 측은 동결돼 있는 기존 의대의 정원 증원에는 동의하면서 대학 신설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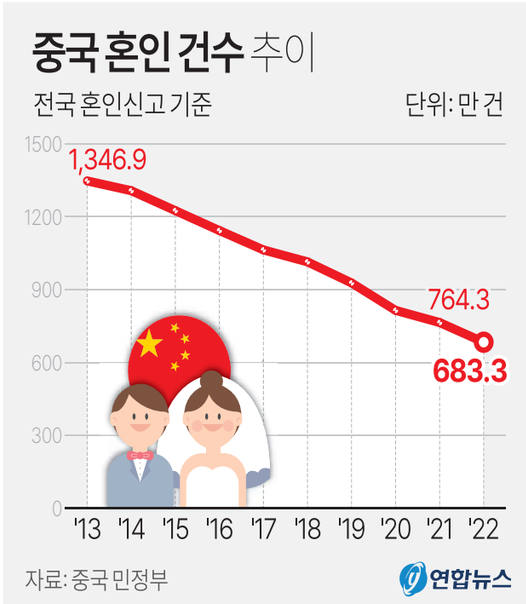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끝내 외면한 모습이다.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의대 신설을 배제하고 정원 증원만 이뤄진다면 지방의 필수 의료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전남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대가 필요하다. 섬과 산간 지역의 사각 해소를 위한 유일한 해법임을 간과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중대한 정책을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울 수 밖에 없는 특정 직능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는 구조도 잘못됐다. 매우 부적절하다. 법적 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패싱하는 셈이다. 지자체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주체를 참여시켜야 한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전남도민의 30년 숙원 국립 의과대학 설립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까지 더해 3년 동안 논의가 중단됐다. 이번에 대한의사협회의 속내가 확인됐다. 공공의대 신설을 통해 오히려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두터운 보상'을 전제로 명시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들의 부도덕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

그래픽 뉴스

중국, 작년 혼인건수 683만건 역대최소…10년만에 반토막



중국의 지난해 혼인 건수가 1년 전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국 민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683만 건으로 전년(763만 건)보다 80만 건 줄었다. 이는 혼인신고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6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중국의 혼인 건수는 2014년 이후 9년 연속 감소 중이다. 2013년만 하더라도 1천346만 건에 달하던 혼인 건수는 이듬해 1천306만 건으로 떨어졌고, 2019년에는 1천만 건 아래로 내려왔다. 이어 2021년 800만 건, 지난해 763만 건으로 내려앉았다. 2013년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반토막이 난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인구는 14억1천175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85만 명 줄었다.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 것은 마오쩌둥(毛澤東·1893~1976)이 펼친 대약진 운동으로 대기근이 강타한 1961년 이후 처음이었고, 유엔 경제사회처의 지난달 말 발표에 따르면 세계 1위 인구대국 자리도 인도에 넘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CMYK